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양상과 대응전략¹⁾

Income Inequality in Korea and Ways to Reduce It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소득불평등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빈곤층과 부유층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중간계층인 중산층의 규모는 축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중위소득/평균소득의 비율의 점진적 감소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득분위별로 소득증가율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상위 20%의 소득은 1990년 대비 107.2% 증가했으나 하위 20%의 소득은 59.9% 증가하는데 그쳤다. 소득계층간 소득증가율의 격차는 도시비근로자 가구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성별로 살펴보면, 자산소득에 비해 지니계수가 낮은 근로소득 비중이 소득하위집단에서 더욱 감소하였고, 근로소득 중에서도 지니계수가 낮은 임금소득이 소득하위집단에서의 감소세가 뚜렷하였다. 소득불평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이 필요하며, 방안으로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최저임금인상, 자영업자 협동조합 활성화, 재정지출 확대, 그리고 장기적·간접적 수단으로 공교육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머리말

“경제성장이 소득 불균형과 가난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한국의 경험은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불균형과 가난을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4월 OECD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빈곤과 불평등에 대해 언급한 대목이다(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2.4). 이 보고서는 1997년 경제위기 전까지 개발도상국 중 소득분

배가 상황이 양호했던 우리나라가 이후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2009년에는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5분위배율(상위 20% 소득/하위 20% 소득)은 5.74로 OECD 평균(5.40)보다 높은 것으로,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은 2008년 15%로 OECD 국가들 중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률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진단을 덧붙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OECD

1) 본 고의 내용은 저자의 견해로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혀둠.

에 보고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분석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 통계청 국제통계연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지니계수가 2010년 0.503으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0.35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0.373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된 바 있다.²⁾ 이처럼 국제청 자료를 이용한 지니계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표본조사에서는 최상위 소득자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조사시점의 차이에 따라 계절노동이나 임시근로의 실태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연말 성과급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³⁾ 또한 2006년 국제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산출된 우리나라 상위 1%의 소득이 전체소득의 16.6%에 이른다는 분석결과도 발표되었다. 이는 OECD 주요 19개국 중 17.7%의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⁴⁾

소득불평등이 심화하면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킨다는 것인데, 경제학에서는 재정정책적 관점, 사회갈등의 관점, 대리인 비용의 관점, 그리고 자본시장 불완전성과 인적자본의 확산의 관점에서 양자간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다.⁵⁾ 최근에는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 뿐

만아니라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고, 결국 실물경제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노동부장관을 지냈던 버클리대학교의 로버트 라이시(R. Reich)교수의 지적인데, 최근 소득이 소수의 부유층에 집중되면서 중산층은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채를 늘리게 되었고, 이것이 최근 금융위기를 부르는 원인이 되어 결국 실물경제까지 위기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⁶⁾ 시카고대학교의 라구람 라잔(R. Rajan)교수와 프린스턴대학교의 폴 크루그먼(P. Krugman)교수도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⁷⁾ 그리고 IMF도 이를 뒷받침하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⁸⁾

소득불평등의 이와 같은 심각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OECD의 진단과 같이 더 이상 성장이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기 어려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에 입각한 정책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1990년부터 2011년까지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소득분배의 추이와 양상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소득불평등의 원인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상황을 간단한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김유선(2012). 국제청 통계로 살펴본 근로소득 불평등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 전계서

4) 박명호(2012).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 조세·재정브리프, 한국조세연구원.

5) 재정정책 관점은 Alesina & Rodrik, 1994, 사회갈등의 관점은 Alesina & Perotti, 1993; 1996, 대리인 비용은 Furman and Stiglitz, 1998; Greenwald and Stiglitz, 1986; Gordon, 1996, 자본시장 불완전성과 인적자본 확산은 Galor & Zeira, 1993

6) Reich(2010). *After Shock: The Next Economy and America's Future*, Vintage

7) Rajan(2010). *Fault Lines: How Hidden Fractures Still Threaten the World Economy*, Princeton Univ. Press

8) Kumhof & Ranciere(2010). *Inequality, Leverage and Crises*, IMF Working Paper, WP/10/268, IMF.

2.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양상

1) 상대적빈곤율, 지니계수

1990년에서 2011년까지 1인 가구를 제외한 도시가구의 상대적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1990년 7.8%에서 2011년 15.0%로 20여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1990년 7.1%에서 2011년 12.4%로 약 75%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1990년 0.266에서 2011년 0.313으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0년 0.256에서 2011년 0.289로 증가하였다.

2) 소득계층별 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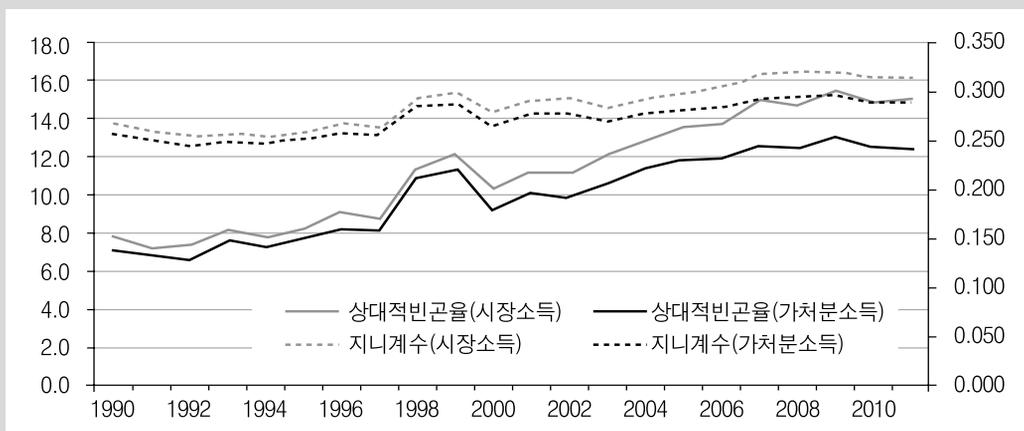
1인 가구를 제외한 도시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기준)을 살펴보면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0년 7.8%에서 1997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11.4%로 두 자리 수를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하면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에는 14.3%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빠른 경기회복에 힘입어 2011년 14.0%로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1990년 17.5%에서 1997년까지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을 하다가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19.5%로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세계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에 21.2%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두 계층의 변화추이를 그림으로 보면 매우 흡사한 패턴을 보인다. 두 계층 모두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1998년과 2008년의 심각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빈곤층도 증가하고 동시에 부유층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위의 그림에서 빈곤율과 지니계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

그림 1. 상대적빈곤율, 지니계수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직이는 이유이다.

이처럼 빈곤층과 부유층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중간계층인 중산층(중위소득 50% 이상에서 150% 이하)의 규모는 축소되어 왔다. 중산층의 규모는 1990년 75.4%에서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인 1999년에 69.0%로 급감했다가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에 66.3%까지 감소하였다. 이 같은 결과, 중산층 규모의 추이는 완만한 사다리꼴을 하고 있다(그림 2의 왼쪽 그림). 중산층의 감소추세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축을 바꾸어서 보면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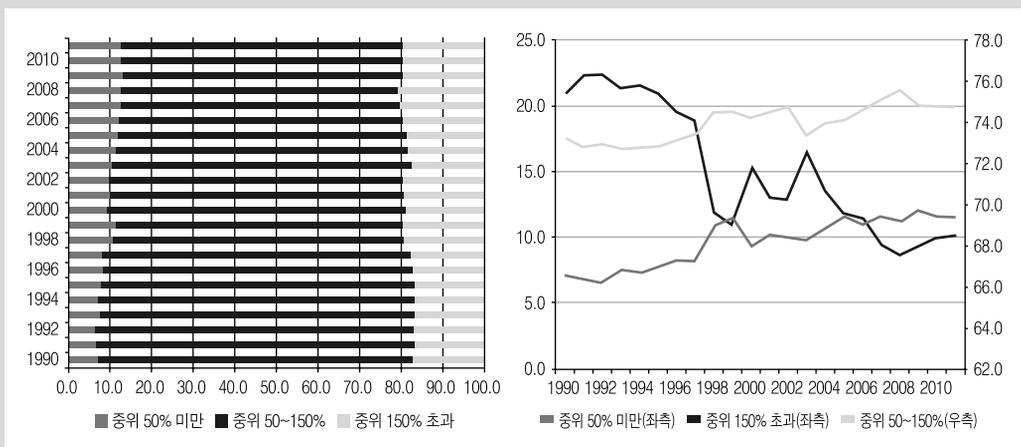
3) 평균소득 대비 중위소득 비율 변화

중산층 규모의 상대적인 축소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평균소득 대비 중위소득의 비율을 들 수 있다. 소득분포가 완전한 정규분포가

되면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이 같아져 이 비율이 1이 된다. 따라서 이 비율이 1에 가까울수록, 즉 중위소득이 평균소득에 가까워질수록 중산층의 규모가 두터운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대로 이 비율이 1보다 더 작아질수록 나머지 계층(특히 상위소득계층)의 소득에 비해 중산층의 소득이 더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1980년대 초중반부터 이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 이들 국가들의 중산층의 상대적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독일, 일본, 핀란드, 캐나다, 이태리, 노르웨이는 강한 감소세를 보이는 한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뉴질랜드, 그리스, 덴마크는 약한 감소 또는 약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⁹⁾

우리나라 1인 가구를 제외한 도시가구의 평

그림 2. 빈곤층, 부유층, 중산층 규모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9) OECD(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균소득 대비 중위소득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의 조세-이전체계가 작동하기 이전인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최저 0.893(2002년, 2008년)에서 최고 0.924(2003년)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조세-이전체계가 작동한 이후인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면, 시장소득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저 0.899(2002년)에서 최고 0.924(2003년)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두 비율 사이의 격차는 조세-이전체계의 작동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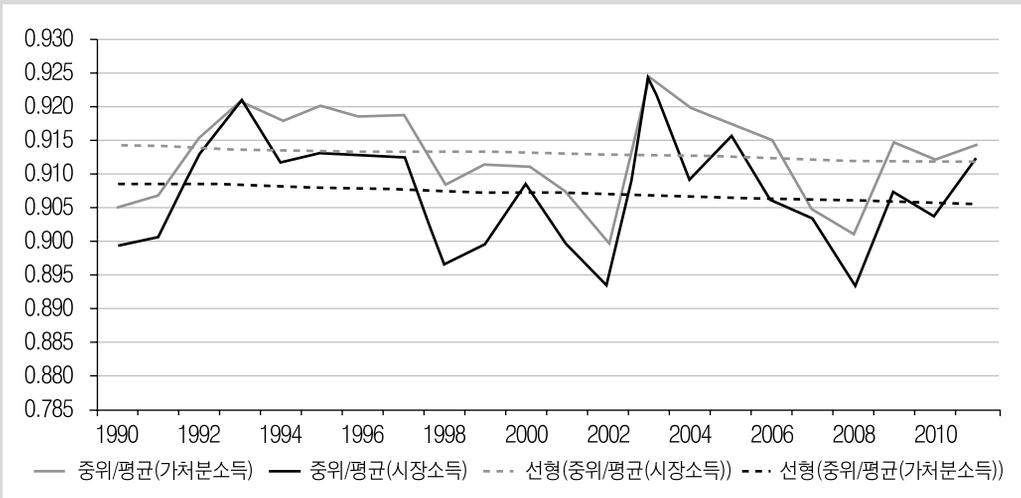
변화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두 차례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이 비율은 최저치로 하락했는데, 먼저 1998년 첫 번째 위

기의 영향에 따라 시장소득 기준 0.896, 가처분소득 기준 0.908로 모두 1990년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후 2003년 최고치에 이르기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두 번째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시장소득 기준 0.893, 가처분소득 기준 0.901로 각각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이후 다시 조금씩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 같은 변동 추이는 [그림 2]의 우측의 중산층 규모변화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4) 분위수배율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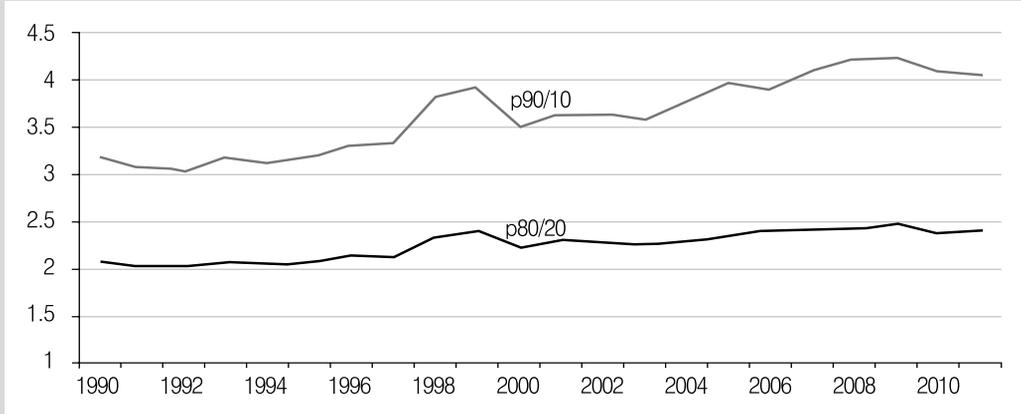
1인 가구를 제외한 도시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분위수배율을 살펴보면, 먼저 p80/20을 살펴보면 1990년 2.07배에서 2011년에는 2.41배로 증가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47배 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IMF 경제

그림 3. 중위소득/평균소득 비율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그림 4. 분위수배율 변화추이(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위기 직후인 1999년의 2.40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p90/10은 1990년 3.17배에서 2011년에는 4.04배로 증가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4.21배까지 증가했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했지만 IMF 경제위기 직후(1999년 3.92배)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림으로 정리해 보면, p80/20은 1990년 약 2배에서 2011년에는 2.5배 가까이 커졌고, p90/10은 1990년 약 3배에서 2011년에는 약 4배를 상회하는 정도로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소득계층간 소득격차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10분위 중 최하위계층 대비 최상위계층의 소득배율의 격차가 보다 급격하게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90년대와 2000년대 말 두 차례의 경제위기에 대한 영향도 최하위계층 대비 최상위계층 소득배율에 보다 크게 미친 것으로 확인돼, 경제위기가

최상위계층과 최하위계층의 소득격차가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소득계층별 소득증가율 추이

소득계층별로 소득증가율을 살펴보는 것은 소득불평등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소득계층별 소득증가율 추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1인 가구를 제외한 도시가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2011년도 기준으로 할인(deflated)하여¹⁰⁾ 이를 5분위로 구분하였다.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전년도를 포괄하면 증가율이 들쭉날쭉해서 소득계층별 차이를 살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1990년부터 5년 단위로 구분(2006년부터 2011년은 6년)했다.

먼저 전기 대비 소득증가율을 보면, 1분위는 1900년 대비 1995년의 소득증가율이 39.2%였

10)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였음.

다가 IMF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1996년 대비 2000년의 소득증가율은 -4.2%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2001년 대비 2005년 소득증가율은 8.8%로 나타났고, 이후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이 반영된 2006년 대비 2011년 소득증가율은 9.8%로 나타났다. 반면, 5분위는 1990년 대비 1995년 소득증가율은 38.1%였다가 IMF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은 1996년 대비 2000년의 소득증가율은 5.1%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하였지만 1분위와 같이 소득이 감소하지는 않았다. 2001년 대비 2005년의 소득증가율은 22.4%로 전기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이 반영된 2006년 대비 2011년의 소득증가율은 16.5%로 나타났다. IMF 경제위기를 겪기 전에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40% 내외의 높고 고른 증가율을 보이다가, 이후부터는 시간이 갈수록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에 비해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더욱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IMF 이후 소득분배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분위 소득증가율이 여타 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인다.

이 같은 경향은 1990년을 기준으로 한 소득증가율을 살펴보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2000년까지 1분위는 33.4% 증가한데 비해, 2-5분위는 각각 42.9%, 45.8%, 48.7%, 45.2% 증가하여 1분위와 나머지 분위간의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1년까지의 증가율을 보면 1분위는 59.9%인데 비해 2~5분위는 각각 91.7%, 101.1%, 105.5%, 107.7%로 1분위와의 증가율 격차가 더욱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와 무직자로 구성된 도시비근로자

가구를 따로 떼서 보면 소득분위별, 시기별 소득증가율에 있어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도시비근로자 가구의 1분위는 1996년 대비 2000년의 소득증가율이 -4.4%로 소득이 감소했다가 2001년 대비 2005년의 소득증가율은 5.7%로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6년 대비 2011년 소득증가율은 -6.2%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사이에 도시가구 전체의 소득이 9.8%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가 발생했다. 5분위의 경우는 1996년 대비 2000년, 2001년 대비 2005년에는 도시가구 전체에 비해 소득증가율이 낮지만, 2006년 대비 2011년 소득증가율이 22.7%로 같은 기간 도시가구 전체의 소득증가율 16.5%를 상회한다.

1990년 대비 2011년의 소득증가율을 보면 보다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도시비근로자 가구의 경우 1분위 소득증가율이 30.8%로 도시가구 전체 소득증가율(59.9%) 보다 20%p 가까이 낮은데 반해, 5분위의 경우는 105.1%로 도시가구 전체(107.2%)에 비해 2.1%p 밖에 낮지 않다.

종합해보면, 소득하위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소득상위 계층의 소득증가율에 비해 낮아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고, 증가율의 격차는 근로자가구를 제외한 비근로자가구에서 더욱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결과는 주요 OECD 국가에서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소득분배가 보다 불평등하다는 사실¹¹⁾이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된다는 최근의 실증연구 결과¹²⁾와 상응한다 할 수 있다.

3. 소득불평등 확대요인

1) 소득불평등 확대요인: 일반론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가장 정형화한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세계화, 기술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labor market dualism)이다. 세계화의 진전 정도와 소득불평등의 정도는 많은 국가들에서 확실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확인되고는 있지만 세계화가 소득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단언할 만큼 확실하게 실증되고 있지는 않는 듯 하다. 기술변화는 숙련노동 편향적인 기술변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인데, 고학력 및 숙련노동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숙련노동의 수요가 높아지는 반면, 다수의 저학력 및 저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들 사이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논리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간 소득격차, 그리고 내국인과 저숙련 및 저임금 이주노동자의 임금격차로 그 패턴을 구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들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실증되고 있다.¹³⁾ 한편, OECD는 2008년 보고서에서 인구구조 변화 자

표 1. 도시가구 유형별 소득분위별 소득증가율 추이

(단위: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A	B	A	B	A	B	A	B	A	B
<전기 대비>										
1990~1995	39.2	38.0	41.3	41.1	42.2	42.6	41.5	41.5	38.1	38.5
1996~2000	-4.2	-4.4	1.1	0.4	2.6	1.9	5.1	5.4	5.1	1.4
2001~2005	8.8	5.7	17.6	15.8	20.6	18.3	20.6	18.7	22.4	19.1
2006~2011	9.8	-6.2	14.1	10.1	14.4	12.2	14.6	12.3	16.5	22.7
<1990년 대비>										
1990~1995	39.2	38.0	41.3	41.4	42.2	42.6	41.5	41.5	38.1	38.5
1996~2000	33.4	32.0	42.9	41.9	45.8	45.3	48.7	49.2	45.2	40.4
2001~2005	45.1	39.5	68.1	64.4	75.8	71.9	79.3	77.1	77.8	67.2
2006~2011	59.9	30.8	91.7	81.8	101.1	92.8	105.5	98.9	107.2	105.1

주: A(도시가구 전체), B(도시비근로자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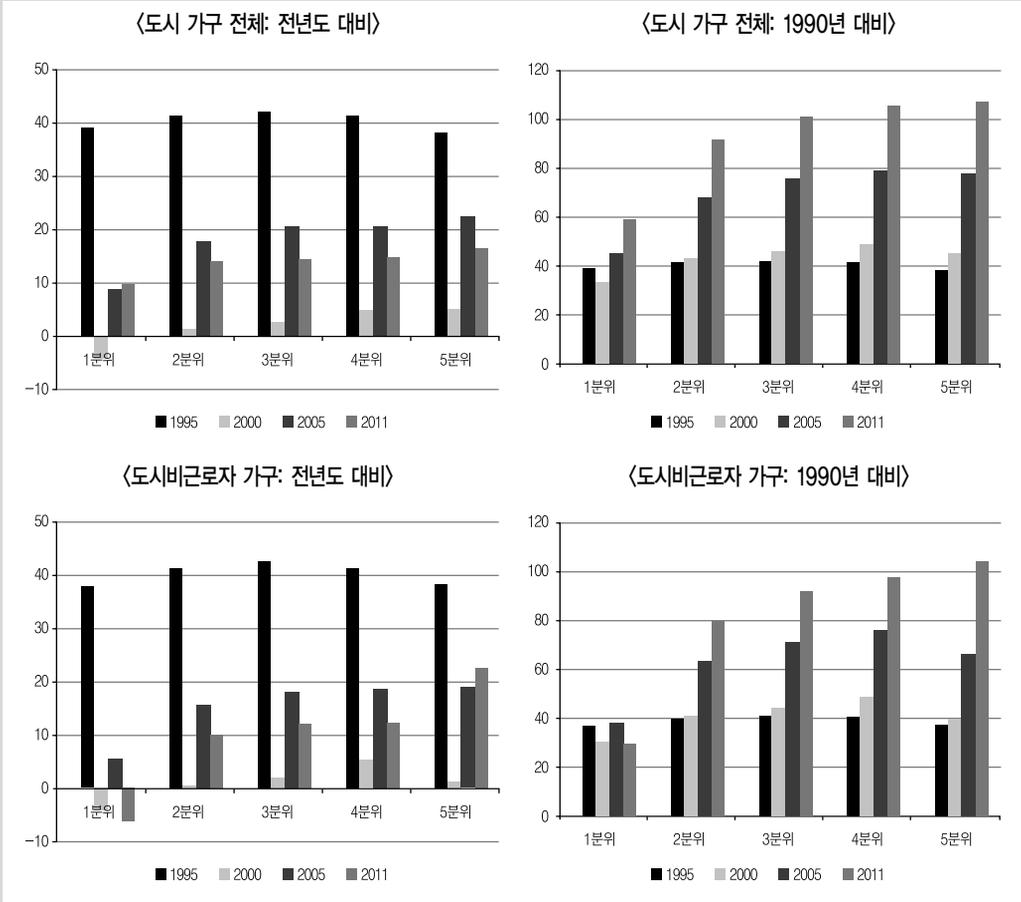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11) OECD(2011), *Divided We Stand – Why Income Inequality Keeps Rising? Country Note-Korea*

12) 강종구·박창귀·조운제(2012), 국가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소득불균등 확대의 원인 분석, *經濟分析*, 18(1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13) 성명재·박기백(2009),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57(4), 한국경제학회.

그림 5. 도시가구 유형별 소득분위별 소득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체보다는 이로 인한 가구구조변화, 즉 1인 가구 증가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¹⁴⁾ 우리나라도 최근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가구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OECD가 보고하는 불평등 심화 메커니즘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1인 가구와 2인 가

구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05년의 최빈 가구원 수는 4인이었으나, 2010년에는 2인으로 바뀌었다. 1,2인 가구 비중이 42.2%에서 48.2%로 6%p 증가한 반면, 4인 가구는 27.0%에서 22.5%로 4.5%p 감소했고, 5인 이상 가구는

14) OECD(2008)

10.0%에서 8.1%로 1.9%p 감소했다.

하버드대 대니 로드리크(D. Rodrik) 교수에 따르면 제조업 비중도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산업부문 중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의 비중이 작아지고,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을 비롯한 여타 산업의 비중이 커질수록 중산층이 축소된다는 논리이다. 제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인적자본 축적이 잘 이루어지고, 연구개발 투자가 집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제조업 종사자들의 다수가 중산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후퇴는 중산층의 축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플레이션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임금소득 의존도가 높은 임금근로자와 자산소득 비중이 높은 부유층에게 인플레이션은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즉, 인플레이션이 높을 경우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이 명목GDP에 완전히 조정되지 못해 실질소득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반면, 실물자산 보유비중이 높은 부유층은 실물자산이 인플레이션에 민감하게 조정됨에 따라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이와 관련해서 근로소득과 자산소득간의 소득분배 차이 또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경우 소득으로 측정된 지니계수가 0.2에서 0.4 사이에 분포하는 반면, 자산으로 측정된 지니계수는 0.6과 0.9 사이에 분포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¹⁶⁾

2) 소득불평등 확대요인: 우리나라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위에서 열거된 원인들 중 간단한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분포의 차이, 임금소득과 비임금소득 분포의 차이 정도가 될 것이다.

(1) 근로소득 비중의 감소

근로소득의 비중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자산소득에 비해 소득분배가 보다 균등한 근로소득(임금소득+사업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전체적인 소득불평등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에 근거한다.

1인 가구를 제외한 도시가구의 경상소득에서 근로소득(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90년 93.8%에서 조금씩 하락하여 2011년에는 90.2%로 3.6%p 하락하였다. 소득분위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소득상위 20%의 근로소득 비중은 1990년 93.6%에서 2011년 92.9%로 0.7%p 하락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다. 반면, 소득하위 20%의 근로소득 비중은 1990년 89.4%에서 2011년에는 68.0% 크게 감소하였다(21.4%p).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 도시가구와 상위 20% 소득계층에 비해 하락세가 뚜렷하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그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자산소득에 비해 소득분배가 보다

15) 강종구 외(2012)

16)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강종구 외(2012)에서 재인용

균등한 근로소득 비중이 소득하위집단에서 급감하면서 전체적인 소득불평등 확대를 추동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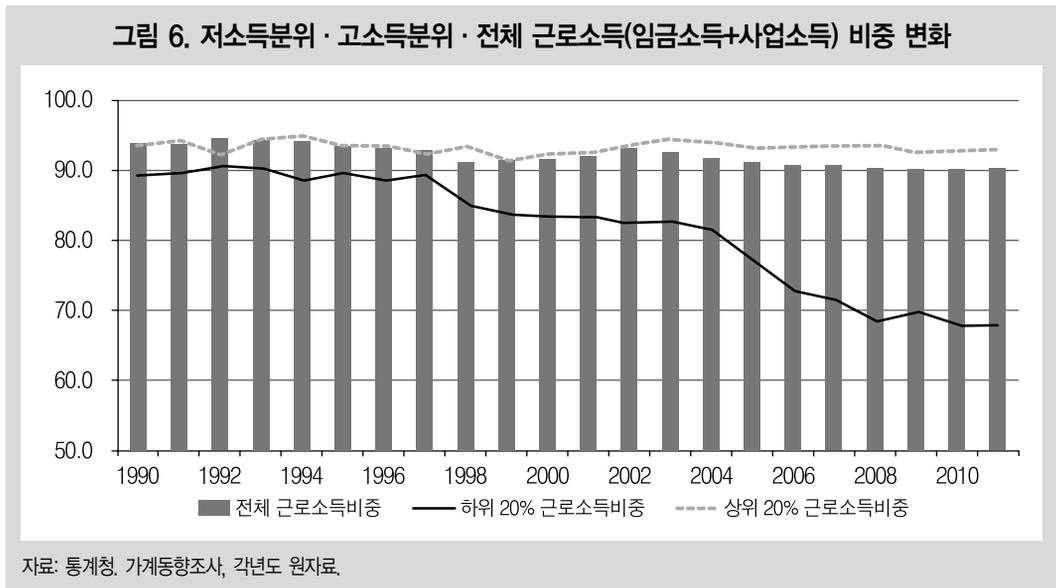
(2) 임금소득과 사업소득 비중의 변화

경상소득에서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후반까지 하락하다 2000년대 초반부터 상승한 후, 2000년대 후반에 들어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그림 7의 왼쪽 그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1990년 64.1%에서 1997년 61.7%로 하락했다가 2008년 69.9%까지 상승한 후 2011년에는 69.0%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업소득 비중은 전체적으로 근로소득 비중과 반대의 추이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하락했다.

소득분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먼저 소득상위 20%의 임금소득 비중은 전체가구보다 높은 수준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1990년 60.4%,

2011년 72.3%로 11.9%p 상승). 반면, 소득하위 20%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뚜렷하다(1990년 62.3%, 2011년 48.4%로 13.9%p 하락). 사업소득의 비중은 두 소득계층 모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락세는 소득상위 20%에서 보다 뚜렷하게 관찰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임금소득의 비중이 증가하고 사업소득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위 20%의 경우는 임금소득 비중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면서 소득하위계층의 사업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자영업을 선택한 소득하위계층이 많아지고 있는 경향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하위계층을 중심으로 소득분배가 보다 균등한 임금소득 비중이 줄어들고,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사업소득의 상대적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적인 불평등 심화에 기여



를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의 소득분포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1인 가구를 제외한 도시가구에서 (임금)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의 가구를 구분해서 각각의 지니계수를 구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은 추이를 보인다. 지니계수의 크기는 근로자가구보다 근로자의 가구에서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임금소득에 비해 사업소득의 소득분배가 보다 불균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가구유형의 지니계수의 차이는 연도별로 등락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1990년 지니계수는 (임금)근로자 가구가 0.243, 근로자의 가구가 0.281로 그 차이가 0.038이었는데, 2011년에는 지니계수가 각각 0.262와 0.331로 증가하면서 그 차이가 0.069까지 확대되었다. 2004년 이후 두 집단간 지니계수의 차이가 더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이 시기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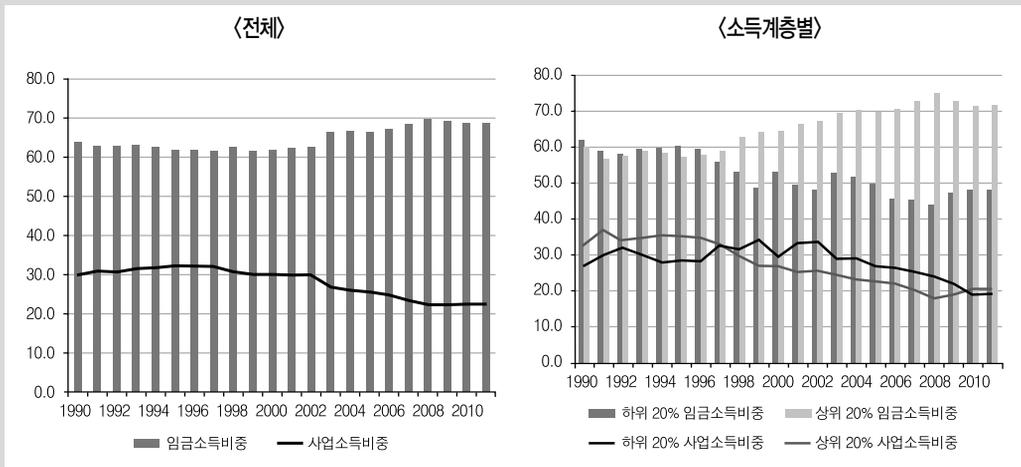
부터 임금소득과 사업소득 비중간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으며(위 그림의 왼쪽그림), 하위소득계층의 임금소득 비중이 다시 줄어들고 있는 것(위 그림의 오른쪽그림)과 일관된다 할 수 있다.

4. 소득불평등 대응전략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은 근로소득(임금소득+사업소득) 비중 축소, 저소득층의 임금소득 비중 축소, 그리고 저소득층의 사업소득의 상대적 비중 확대의 경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 대응전략도 이와 같은 경향성에 입각해 수립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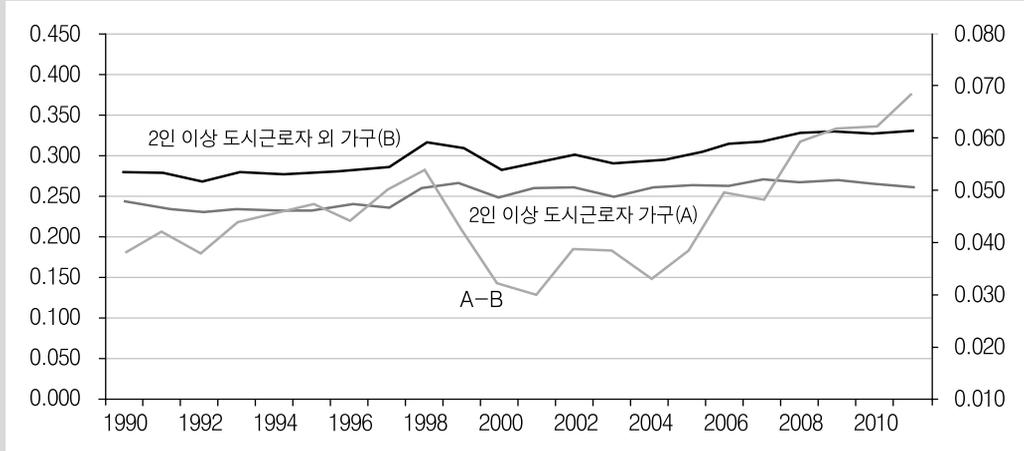
이 같은 진단에 가장 충실한 대응방안은 노동시장정책이라 할 수 있다. 노동시장정책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

그림 7. 임금소득-사업소득 비중 변화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그림 8. 근로자 가구-근로자의 가구의 지니계수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실직을 하더라도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그 유용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되어왔기 때문에 따로 구체적으로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노동시장 내부의 이중구조를 해소해 나갈 방법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최저임금제이다. 노동시장정책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이기도 한 최저임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얼마 전에 2013년도 최저임금이 노동자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되었는데,¹⁷⁾ 전년대

비 6.1% 인상률로는 2008년 들어 크게 하락한 최저임금의 명목·실질 상승률을 반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¹⁸⁾ OECD는 최저임금 수준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유럽연합은 6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재계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논리로 항상 등장하는 것이 고용창출역력과 경제 성장에 대한 부담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저임금근로자의 임금분배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실증연구결과¹⁹⁾와, 최저임금의 상승은 총수요를 증대시켜 경기침체에 내재된 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로 기능할 수 있다²⁰⁾는 측면을 충분히 숙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 금년보다 280원 인상되어 시간당 4,860원으로 의결되었음.

18) 2008~2011년 결정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5.0%로 노무현정부 10.6%, 김대중정부 9.0%, 김영삼정부 8.1% 등 역대정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도 현 정부가 연평균 1.4%로 노무현정부 7.7%, 김대중정부 5.5%, 김영삼정부 3.1% 등 역대정부에 비해 낮은 수준임(고용노동부 자료, 연합뉴스 기사, "최저임금 상승률 MB 정부가 역대 최저" (2012.7.3)에서 인용).

19) ILO(2010), *ILO Global Wage Report 2010/11*

그리고 기왕에 자영업을 선택한 경우라면 자영업자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실업자가 충분한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실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사업에서 교육훈련과 창업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기변동에 민감한 영세자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 후에도 경기변동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축적할 수 있는 사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영세자영업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방법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이 법적인 테두리를 갖추게 되었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고안되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방식을 조심스럽게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앞서의 진단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소득재분배 수단으로써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빼놓을 수 없다. OECD(2011)는 “한국은 현금 이전보다 공적 서비스(교육, 의료 등)에 더 많은 지출을 하였지만, OECD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두 영역의 지출 모두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²¹⁾ 1인 가구를 제외한 도시가

구의 경우 지니계수 감소율을 계산해보면 2011년 약 7.8%(세전 0.289, 세후 0.313)로, 1인 가구를 포함한 전국가구의 경우에는 약 8.8%(세전 0.331, 세후 0.302)로 나타난다. 이 같은 감소율은 OECD 평균 감소율 25%²²⁾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OECD의 보고서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현금이전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간접적이면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인 공교육 강화를 들 수 있다. 이 방안은 세대간 소득이동성 저하, 교육수준과 소득의 상관관계, 부모의 소득과 교육수준의 상관관계, 이 세 가지 연결고리를 통해 부모의 소득수준이 자녀의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소득불평등이 심각할수록 세대간 소득이동성이 약해진다는 연구결과²³⁾와 우리나라에서 공교육 강화가 세대간 소득이동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²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 강화는 ‘인적자본에 대한 보편적 투자 → 노동생산성 향상 → 임금상승’이라는 전통적인 원리에 충실하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 오늘날 교육이 세대간 소득이동성을 가로막는 메커니즘을 상쇄시키는 방법으로써의 유용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문**

20) 전계서

21) 공적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GDP대비 약 9%(OECD 평균 13%), 현금이전 지출은 약 2.5%(OECD 평균 11%)임. 특히 근로가능연령대의 개인과 가족에 대한 현금이전 지출은 지난 10년간 두 배 가량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GDP의 1%정도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음(OECD, 2011).

22) OECD(2011)

23) Corak(2011). “Inequalit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United States in Comparison,” in Robert Rycroft (editor), *The Economics of Inequality, Poverty, and Discrimination in the 21st Century*, ABC-CLIO, forthcoming.

24) 여유진 외(2011).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 연구, 연구보고서 2011-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